

벌집 쑤신 국민의힘...尹의혹 '제보자 누구?' 루머 증폭

고발장 초안, 정점식→당무감사실→고발담당 변호사 정황도 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사실상 '제보 의혹' 부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불길은 국민의힘 내부로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다. 애초 의혹의 본질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개입했느냐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안의 초점은 제보의 경로와 실제 고발이 이뤄진 과정에 쏠리는 양상이다. '사주 의혹'은 빠지고 '고발 의혹'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 제보자 지목 조성은 "윤석열·김용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제보자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조성은 씨는 지난 8일 심야 SNS를 통해 "윤 전 총장과 김용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동안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 씨에게 줬고, 조 씨가 최근에 이런 사실을 매체에 제보했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때문에 조 씨

가 검찰에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광산도 의원은 9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진위를 물었으나, 박 장관은 "제가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이 조 씨를 거쳐 당시 총선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있던 김모 변호사에게 들어갔고, 그가 이를 제보했다는 설이 들었다. 김 변호사가 현재 황교안 대선 후보 캠프에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자 황 전 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황교안 캠프는 김XX라는 분과 전혀 관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 정점식이 당에 고발장 전달?...이준석은 "피악 못했다"=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작성했던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 초안이, 김 의원이 대검에서 받아 전달했다는 의혹의 고발장과 흡사한 것으로 드러나 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상규 변호사는 전날 입장에서 "제가 당에서 받은 내용은 김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과 김 의원이 '뉴스버스'의 보도에 쓰인 텔레그램 캡처 화면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뉴스

버스는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 이름이 나오는 해당 캡처를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유력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난해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

고, 당무감사실은 이를 조 변호사에게 건넨 정황이 전해졌다. 정작 이준석 대표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국내 대형 플랫폼 갑질 관행 손 본다

카카오·네이버 불공정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아울러 내달 국정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기조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

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최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 여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은 '온라

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사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0여 개 제출된 상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강병욱 의원은 9일 "그동안 법 제도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내 IT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생발전을 위해 약자인 중소 입점업체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자체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소속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해 자체 조사를 한 뒤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주 "언론중재법 개정은 필요" 언론계 "정파적 법안"

'언론표현의 자유...' 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9일 일부 조항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정의당과 언론관계기관·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이 피해자 구제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관계기관 주관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다.

정의당이 주관한 토론회지만 민주당 오기형 이영우 정필모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은 "언론중재법 자체로 보았을 때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에 논란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 역

시 토론자로 나서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더라도 언론중재법은 분명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언론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연 오픈넷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정밀적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른 억제나 예방 체제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언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오늘 광주 방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광주·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방송사에서 뉴스 및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유 의원은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카페에서 졸업생 및 재

학생들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MZ세대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유승민 TV'에서도 실시간 방송된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농민기본 소득제 도입·농수산업 전폭 지원"

심상정 전남도의회 기자회견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심상정 의원은 9일 전남을 찾아 "농수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농민수당제 도입,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으로 전남을 새롭게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 투자, 투 트랙으로 전남의 발전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또한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은 전남의 풍요로운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는 가운데,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화했다.

심 예비후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께서는 34년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주셨다"며 "그러나 민주당에 입입했

던 기간 동안 전남 인구는 75만이나 줄었고,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저와 정의당이 전남을 새롭게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지역 대표 공약으로 ▲농수산업 국가 식량안보 차원으로 격상 및 전폭 지원 ▲명실상부한 농민 기본소득 도입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 원천 차단 ▲전남 서남권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2030년까지 80조원 투입 및 일자리 창출·지역민과 이익 공유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제시했다.

심 예비후보는 농업·농지와 관련해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농수산업을 공공산업으로 간주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며 "농지의 경우 농민들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정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음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권총과 매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집일시: 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14시
2. 소집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꽃로 278, 1105호 (가산동, 에스케이테크노빌)
3. 회의목적사항
 - 【부의인건】
 - 제1호 의안: 나주 소재 본점 이전의 건 (이건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29)
 -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사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등기이사 / 감사 사임 및 신임 등기이사 /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기타사항
4. 실질주주의 의견결정사항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한국에택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견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위임하여 의견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총참석장(또는 소집통지서) 신분증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1년 09월 10일
주식회사 골드론
대표이사 양미상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 7. 21.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 앞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됩니다.

2021. 9. 10.
주식회사 이맹 인터스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혈암길 20-12
청산인 이용환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다랜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예성전기(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1년 09월 05일 각자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중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330조의3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9월 10일
"갑" 상 호 다랜드주식회사
소 재 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방안로 116번길 24, 302호
사내이사 오창
"을" 상 호 예성전기 예성전기
소 재 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34, 2층
대표이사 임환성

先州日報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6900

지국 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동구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남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정 222-8171
서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광산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임 603-0311 • 화 정 369-1625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